

정부, 13.6조 긴급경영자금 푼다… CPTPP 가입방안 검토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최대 270조 무역금융 동원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공급
철강 분야 등 내수 진작책 병행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과 최대 27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동원하는 대책을 내놴. 아울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지원 ▲내수 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긴급자금지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진공·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13조600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 산업은행은 피해업종에 대해 저리 운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금(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추가 0.3%p 인하한다. 수은은 6조원 규모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신보·기보는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 목표를 256조원에서 14조원 늘린 270조원으로 상향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적용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기업 신용도나 한도 제약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가 신설된다. 기업 상황과 프로젝트 특성을 종합 검토해 기존 규정상 제한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상호관세 50%가 적용돼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이자 차액 보전과 공급망 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해외 수요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자

동차·가전·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내수 진작책도 병행한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전기차 전환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 ESS 보급 확대 등이 핵심이다. 유턴보조금(국내복귀 지원금) 지원 비율은 57%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건설·해상풍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국산 기자재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이차전지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하반기 별도로 마련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철강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합의됐으나 세부 품목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농수산업계 반발 등으로 불발된 CPTPP 가입 검토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은 문재인 정부 말기 의결했으나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업데이트했고 회원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또 “국회 절차를 밟아야 하고, 농수산 분야 민감 이슈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경제권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전 세계 GDP의 15% 규모 시장에 추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출은 연간 20억~30억 달러 늘고, GDP도 최대 0.3%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기계·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관세 철폐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농축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추후 업종별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만든 대책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하반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수출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50% 확대

중기부, 4.6조 자금·보증 신속 지원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20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도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 확대와 함께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해 품목별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확대 뿐만 아니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온전자금 한도도 10억원(기존 5억원)으로 올린다.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을 통해 미국 관세 부과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을 50% 확대한 3억원(자부담 포함시)까지 늘린다.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는 한시적으로 2배(3000만→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엔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미국에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도 구축한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하반기에 꾸려 수출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는 범정부 지원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기위해서다.

또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가치를 현지에 알리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도 강화한다.

바이오(충북), 해운(부산), 섬유·안경(대구) 등 지역별 특화·주력품목별 맞춤형 전용 프로그램과 무선 전자기기 보안 등 미국·EU 등에서 강화되는 수출규제 대응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 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별 주력품목 선정 후 검증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해외조달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제36회

화도진축제

9. 5. (금) ~ 9. 7. (일)

동인천역 북광장/화도진공원 일원

9.5(금)

· 조선미술사 공연
· 뮤지컬 화도진
· 개막식 및 개막 축하 공연

9.6(토)

· 청소년 프린지 페스티벌
· 어영대장 축성행렬
·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9.7(일)

· 어린이 댄스 대회
· 대학 페스티벌
· 구민 노래자랑
· 폐막식 및 축하공연

화도진공원

· 역사토크 콘서트
· 무형문화재 공연
· 화도진 버스킹

※ 부대행사 : 전통군영체험존 · 체험 및 홍보부스 · 먹거리 장터